

월요광장

조개·가재의 아픔



김우항
이화여대 석좌교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자연환경을 알려 주는 여러 사실들이 보도되었다. 그 중에는 그 동식물의 수가 2,296종이고 멸종 위기의 동물이 8종, 천연기념물이 되는 동물이 8종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조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동식물의 귀중함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멸종 위기의 동물, 그리고 희귀한 동물이라는 분류는 희귀하거나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백만 년에서 수 만년이 걸리는 진화의 기적에 대한 경탄의 느낌, 생명체 일반에 대한 연민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생명체에 대한 연민은 E. O. 윌슨이 표현

하는 ‘생명진화감’이라는 말로 옮겨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느낌은 좋은 말이면서, 사람의 삶의 선택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

불살생(不殺生)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계율이다. 그러나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신라 불교는 이것을 살생유택(殺生有擇)으로 환치(換置)한다. 사람은 생명을 소비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 삶의 비극이다.

얼마 전 외국 뉴스에 조개와 같은 갑각류(甲殼類)가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실험 생물학지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에 실린 연구보고서의 실험 결과를 보도한 것이 있었다. 조개는 갈매기와 같은 새들의 공격을 피하여 바위의 어두운 그늘에 숨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늘에 숨을 때에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반복하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는 것이 실험의 요점이다.

이것은 조개가 아픔을 안다는 증거다. 비슷한 사실은 새우, 가재, 게, 로브스터와 같은 다른 갑각류 동물 연구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결론의 하나는 식용 해산물을 취급하는 데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가령, 양식장에서 로브스터를 잡아서 그 집게발을 떼고 다시 바닷물에 던져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일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동물 사육(飼育)이나 운반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면, 9시간을 간 다음에는 동물들을 한 시간 정도 쉬게 해야 한다. 이때 동물들에게는 물과 음식과 적당한 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 동물들의 종차이는 결국 도살장이다.)

영국에서는 이것이 의회를 통과한 법 규정이 되어 있다. 법을 떠나서, 생활 관습에서도 이에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낚시꾼들은 나무망치를 가지고 다닌다. 물고기를 잡자마자 머리를 망치로 쳐서 의식을 잃게 하여 물고기의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잔인해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 또는 식도락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어떤 경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19세기 초의 미국 작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한 소설에 보면 이러한 삽화가 있다. 뉴욕주의 어떤 곳에서는 가을이면 기러기들이 온 하늘을 덮으면서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 철새들을 총으로, 심지어는 대포로 잡는 경장을 벌리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스포츠이다.

이름 난 사냥꾼인 소설의 주인공은, 이 자연 발생의 스포츠 마당에 나타나 한 마리의 새만을 잡아 집으로 간다. 한 마리면, 자신의 저녁 식사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삽화는 동물에 대한 태도에서 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포함된 모순된 과제들을 해결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물고기나 낙지 또는 굴을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이다. 날 것을 즐기면서도 그것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비슷한 인생의 여러 모순들을 생명 존중으로 다가가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표현된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바라는 것은 그 관심이 생명에 대한 더 넓은 고민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또 그런 고민이 우리 사회 모순의 해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說

박근혜 정부 내각인사 역사나 ‘호남 소외’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호남 소외가 계속될 것인가. 1차 조각(組閣)에 이어 2차 조각에서도 호남 출신 인사가 배제되고, 수도권과 영남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호남사람들은 실망감을 넘어 환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2차로 발표된 11명의 경제 부총리 및 장관급 인선에서도 서울과 영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전멸하다시피 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차 조각에서 6개 장관급 가운데 호남 출신은 없었으며, 이번에도 이 지역 출신이 사실상 없애 버렸다. 박근혜가 새 정부의 국정 기조로 제시한 인사대타령과 국민대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유일하게 호남(완도)으로 거론됐던 방하남 고농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분류되고,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역시 본직자가 전북 고창일 뿐이지 서울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늬만 호남’인 셈이다.

이에 반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장관이 10명, 영남은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이나 된다. 언론의 하마평에 수도 없이 오르내렸던 유력 호남인사들의 이름은 온데 간데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호남을 찾은 때마다 “호남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한 말과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타령인사부터 펼칠 것”이라며 “호남의 인재, 여러분 아들·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거부감으로 다가설 뿐이다. 믿고 기대했던 게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또다시 퇴행적인 ‘호남 소외론’이 회자된다는 게 이전 지겨운 따름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국민대통합의 단초는 호남인재의 중용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실책’로 귀결되는 것은 철저한 호남 출신에서 비롯된 특정 지역 편향이 그 요인이다. 호남이 없는 대타령과 대통합은 있을 수 없다.

여수산단 화학물질 사고 속수무책이구나

여수산단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소방 관련 장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수소방차 등이 노후화된데 필수적인 개인 보호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해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 구미와 충북 청주의 불산 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수산단을 관할하는 화성화상프로그램 실시, 속식보호, 장입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업무는 모두 범죄에 방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출신자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광주·전남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죄는 많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사회에 복귀하는 출신자들은 이미 자신의 죄값에 대한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출신자들에 정신택·물질적으로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취급하는 산단의 특성상 사고에 취약한 데 반해 대비는 극히 허술한 것이다.

전남도내 소방차 노후화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체 25%에 달해 전반적인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태다. 펌프차 207대 가운데 62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화학차 17대 중 8대도 사용 기간을 넘겼다.

섬지역 화재 대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16대 소방차량 중 5대가 노후화됐고, 2219개 섬을 담당하는 11개 지역의 소방관은 20명뿐이구나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내 특수소방차와 방호장비 및 일선 소방서의 부족한 소방차량 확보를 위해 정부에 144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고는 하나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예견된 사고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질, 독성가스를

법조칼럼

출소자들을 위한 따뜻한 시선을 꿈꾼다



이본식
변호사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듯이 범죄에도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정서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무슨 범죄만 일어나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런 범죄자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당연히 특별법이나 법정형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 마치 이러한 추

세가 우리나라 형법 변천의 당연한 절차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 지역사회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 어두운 일면도 과감히 끌어안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으로 과감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해 군법무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필자와 친한 형이 모임 하나를 만들어왔던 필자로서는 참으로 어색하고 쑥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범죄자들을 붙잡아 전과자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위해 열성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출발하면서 출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새로운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임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조

그만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필자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범죄로 인한 비용은 약 158조원이라고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작용에 대한 훈련 없이 나간 일반출소자는 재범률이 52%지만 출소 후 후원을 통해 사회 적응을 한 출소자의 재범률은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출소자들의 재범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 삶을 열기 위한 출소자들의 노력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지만, 공단 자체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출소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출소자들을 도와주려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출소자는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회의 편견은 더 많은 이들이 출소자에게 도움을 주기를 꺼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출소자 중 일부만이 겨우 공단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22일 광주 수아비스 웨딩컨벤션에서 출소자 7명의 인생 제2막을 열어주는 ‘제2회 플라타너스결혼식’에 참석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하는 일은 플라타너스결혼식개최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실시, 속식보호, 장입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업무는 모두 범죄에 방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출신자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광주·전남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죄는 많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사회에 복귀하는 출신자들은 이미 자신의 죄값에 대한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출신자들에 정신택·물질적으로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기고

‘열린 소통의 장’을 펼치며



정민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 속에는 강과 산이라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변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강산’의 변화보다는 ‘환경’의 변화 속도는 가능할 수가 없어 ‘10년’이란 물리적 시간 동안 현대행정은 더욱 복잡해졌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어떠한 조직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민주주의 시스템 정착에 100년 넘게 걸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빠른 정착과 지방자치 부활의 역사도 짧아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과제였다.

다행히 우리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시대 흐름을 읽어내어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간파하고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민관파트너십형성단계였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특정분야 주제별, 분과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 제안을 도출했고, 2012년에는 정책의제 공모라는 새로운 모델 찾기가 시도되는 등 진정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다.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운영한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만큼 지방자치의 선진 역사가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을 터닝포인트(turning point)에서 서 있다. 거버넌스를 넘어서 단순히 시민참여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공동의 행정관리를

하는 로컬거버넌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분명, 시민들의 ‘공동비전’을 위해 수차례 만남과 토론, 상호존중과 합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해 왔던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은 로컬거버넌스 시대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민관합동정책워크숍에서의 우리시의 지원과 협력은 타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고 참여단체도 민주주의의 꽃피운 단체인 주민자치, 사회적 기업, 주민회의 등 지역단위 조직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관합동워크숍의 성과를 ‘행정과 예산’의 반영이라고 보았을 때 워크숍의 정책제안들이 다음연도 시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자 참여단체들이 늘어났음은 물론 참여단체 성격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복소리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지금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토대인 지방자치를 위해 사회·문화·경제·환경은 물론 복지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고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문득,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

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함께 서 있오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마라, 삼나무와 참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라는 시구가 생각난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행정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수평적 관계에서 조력해야 공생 발전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아이디어의 원천인 시민단체가 외부의 변화를 철저히 분석하고 서로간의 전문성을 지지해 주면서 행정과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새로운 행정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실히 개방해야 한다. 기발한 정책 하나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평생의 먹거리를 마련해 주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각자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준 시민사회와 행정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나누고 비전을 공유할 때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멋진 정책이 민관합동워크숍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無 等 鼓

강화도에 살고 있는 함민복 시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가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덕이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발랑발랑한 힘’과 ‘궁정적인 밥’처럼 시인은 가슴 따뜻한, 딱딱한 시(詩)와 같은 사람이었다.

함 시인의 대표작 ‘궁정적인 밥’의 한 대목은 이렇다. ‘시(詩) 한편에 삼만 원이면 /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 시집 한권에 삼천 원이면 / 든 공에 비해 활하다 싶다가도 / 국밥이 한 그릇인데 /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 사랑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을까 /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중략)

함 시인과 그의 시가 갑자기 생각난 건 며칠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접해서다.

문체부가 문학, 미술 등 2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6.7%가 창작 활동과 관련한 수입이 100만원 이하였다. 그 중에서도 문학 분야

취급하는 산단의 특성상 사고에 취약한 데 반해 대비는 극히 허술한 것이다.

전남도내 소방차 노후화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체 25%에 달해 전반적인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태다. 펌프차 207대 가운데 62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화학차 17대 중 8대도 사용 기간을 넘겼다.

섬지역 화재 대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16대 소방차량 중 5대가 노후화됐고, 2219개 섬을 담당하는 11개 지역의 소방관은 20명뿐이구나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내 특수소방차와 방호장비 및 일선 소방서의 부족한 소방차량 확보를 위해 정부에 144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고는 하나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예견된 사고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질, 독성가스를

함을 힘들어하다가도 급세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그릇’이기를 바라는 게 시인의 마음이고 예술가의 마음이다. 팍팍한 세상에서 시에, 노래에, 그림에 위로받는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살아가는 지도 모른다.

단칸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에서 촉발된 ‘예술인 복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며칠 후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북돋우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내놓기를 바란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주방 CCTV 설치 확대, 식당 신뢰성 높이자

얼마 전 인천시 부평구에 갔다가 참 관중은 식당을 보았다. 다른 아닌 식당의 주방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완전 100% 리얼 영상을 식당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

고, 그 사업에 동참하는 식당들에게는 CCTV설치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다. 당장은 음식 재량이 사라질 것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완전 공개되기 때문에 주방의 위생 청결은 완벽할 결과 본다.

제왕 된 음식의 경우 잘못하면 침을 매개

로 간접이나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고, 생각할수록 불결하고 역겨운 일이다. 또한 재료 값과 인건비, 임대료가 올라도 업주들은 반한 가치수를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다. 손님이 꼭 끊기기 때문이다.

나는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우리 광주는 물론이고 전남북 모든 식당들이 장기적으로 관내 모든 식당에 CCTV 설치를 추진했으면 좋았고, 두 번째는 손

님들 스스로 음식과 반찬 가치수를 많이 요구할 게 아니며 아울러 먹을 만큼만 먹되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방 내에 CCTV설치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홍보를 통해 먹으려는 음식점만 주문하고, 차려진 음식은 남김없이 먹고, 먹은 만큼 계산하는 음식문화 캠페인을 벌여왔으면 좋겠다.

▲유병화·광주시 복구 일곡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